

# 산은·수은, 두산중에 1조 지원

코로나19에 자금시장 경색 '위기' 외화대출 6000억 만기부담 덜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경영위기를 겪는 두산중공업에 신규자금 1조원을 지원한다. 두산중공업은 26일 산업은행·수출입은행과 1조원 규모의 대출 약정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두산중공업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두산에서 두산메카텍(주) 주식을 현물출자 받아 자본을 확충하고, 고정비 절감을 위해 명예퇴직을 하는 등 자

구노력을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돼 은행 대출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대출은 두산중공업이 수출입은행과 협의 중인 6000억원 규모 해외공모사채 만기 대출 전환 건과는 별건이다. 두산중공업은 4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채권을 대출로 전환해달라고 지급 보증을 한 수출입은행에 요청한 상태다.

수은이 이에 응하면 두산중공업은 신규자금 1조원에 더해 외화대출 6000억원 만기 부담도 덜게 된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두산중공업은 이번 대출을 발판 삼아 당초 계획하고 있었던 재무구조 개선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두산중공업은 빠른 시일 내 재무구조 개선활동을 마무리하고 금번 대출금액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산중공업의 대주주인 (주)두산은 이번 두산중공업의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제공을 결정하고 (주)두산이 보유한 두산중공업 보통주식을 비롯한 주식,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與野, 투표용지 순번 전략 '의원 바꾸주기'

비례대표 정당 파견의원 모집 분주

여야가 비례대표 위성 정당에 '의원 꿰주기'를 하고 있다. 총선 투표용지 기호 순번을 위성 정당과 맞추기 위한 전략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27일 지역구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지역구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투표용지 기호 순번도 결정된다. 투표용지 순번이 정당별 소속 의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여야는 비례대표 위성 정당에 파견할 의원 모집에 여념이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소속 의원을 파견하는 중이다. 26일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파견한 민주당 의원은 모두 7명이다. 이 가운데 비례대표인 심기준·정은혜·제윤경 의원은 25일 의원총회에서 제명을 의결한 뒤 더불어민주당에 보냈다. 비례대표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제명을 의결해야 타당으로 이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 지역구 의원이 4명(이종걸·이규희·이훈·신장현 의원)에 불과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

례대표 정당 투표용지에 기록하는 정당 기호 중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는 지역구 현역 5명 이상을 갖거나 직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만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경우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26일 오후 9시 의원총회를 열고 미래한국당으로 보낼 비례대표 의원 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한다. 26일 현재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한 통합당의 의원은 모두 10명이다. 이 가운데 지역구 의원은 8명이다. 다만 통합당 입장에서 투표용지 기호 순서가 미래한국당과 동일하게 2번으로 통일되는 것을 선호해 더불어민주당에 파견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 규모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한편, 26일 기준으로 총선 투표용지 기호는 민주당(1번), 통합당(2번), 민생당(3번), 정의당(4번) 등이다. 정당 투표의 경우 민주당과 통합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아 민생당이 1번이 된다. 뒤이어 미래한국당(2번), 정의당(3번) 등 순서로 정해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추가로 민주당 현역 의원이 영입될 경우 정당 투표용지 순번은 달라질 수 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ICT 피해회복, 소상공인 지원 등 총력

과기부, 코로나19 3대 TF 운영

KISDI·NIA 등 유관기관 첫 회의 기술료 감면, 민간부담금 완화 등 ICT업계 애로청취·지원대책 마련 통신3사와 취약계층 지원방안 모색



장석영 과기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3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정부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힘을 모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6일 장석영 2차관 주재로 'ICT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ICT 업계 피해회복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ICT로 경제활력 제고 등 3대 분야별 태스크포스(TF)를 개설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초기부터 'ICT민관합동 대응반' 회의를 2차례 개최해 ICT 업계 피해상황 점검 및 대책마련을 논의해왔으며,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와 장·차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전이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가동되는 등 비상경제 상황임을 인식해, ICT 분야 대응체계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TF는 통신3사 CEO 간담회 등과 같이 정부와 ICT 업계가 공동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TF이다. 이 TF는 통신사, 방송사, 인터넷 기업 및 우정사업본부 등과 함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5일 개최된 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는 통신요금 감면, 중소 단말기 유통점 운영자금 지원, 이자상환 연장, 저소득층 온라인 교육 무상 지원 등의 지원대책이 논의됐다.

ICT로 경제활력 제고 TF는 그동안 통신사의 5G망 등에 조기 투자, 마스크 앱 개발 지원, 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 지원, 원격·재택근무 솔루션 지원 등 ICT로 민·관이 함께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TF이다. 앞으로 경제·ICT 전문가와 함께 비상경제 상황에서의 ICT 역할과 중·장기적 대응방향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장석영 2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원격근무와 교육 등 ICT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우리 경제에 자리잡고 있다"며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ICT가 경제체질을 개선하며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와 방안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장석영 2차관을 반장으로 한 'ICT비상대책회의'와 3대 분야별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이를 지원할 유관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첫 회의를 가졌다.

ICT 업계 피해회복 TF는 코로나19로 인한 ICT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TF이다. 이 TF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발표했던 기술료 감면, 민간부담금 완화, 대체인증 시간·비용감축 등 지원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내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슈퍼컴퓨터 개발 선도사업에 460억 투입

과기정통부, 4년간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슈퍼컴퓨터 개발 선도사업을 올해부터 2023년까지 460억원 규모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슈퍼컴퓨터 개발 선도사업에 90억원이 투입된다.

슈퍼컴퓨터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처리·활용 가능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정부는 2011년 제정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슈퍼컴퓨터 기술 개발을 지원해왔다.

이번 사업은 슈퍼컴퓨터의 핵심인 중앙처리장치(CPU)를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하기 위해 슈퍼컴퓨터 CPU의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를 함께 설계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우선 슈퍼컴퓨터용 고성능·저전력 CPU 및 코어 설계 기술을 확보·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및 계산노드를 개발하고, 여러 대의 계산 노드를 연결해 클러스터 시스템 시제품을 개발한다. 또 CPU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 초기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함께 설계하고 슈퍼컴퓨팅 응용 분야에 특화된 CPU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4년 후 슈퍼컴퓨터 CPU 시제품을 개발하고, 후속 연구를 연계해 슈퍼컴퓨터 CPU 기술 개발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채윤정 AI전문기자

## 과기정통부 지역 사이버안전망 구축 정보보호센터 2곳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의 사이버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 정보보호 지원센터 2개소를 추가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는 협업모델로 지역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경북·충남센터는 6월에 개소해 경북, 충남 지역의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현장컨설팅 ▲웹 보안취약점 점검 ▲정보보호 관련 법률 상담 ▲개인정보보호 등을 지원한다. /채윤정 AI전문기자

## 우수中企 '브랜드K' 자금·수출지원 강화

중기벤처부, 확산전략 합동발표 한류 이미지로 영향력 확대키로 'K방역' 활용 바이오·의료분야 추가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위한 국가 공동브랜드 '브랜드K'를 한류와 연계해 홍보하는 등 '브랜드K'에 대한 정부의 자금·수출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브랜드K 확산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보다 브랜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브랜드K'의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고, '브랜드K'의 대내외 이미지를 높여 유망기업의 참여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케이콘(KCON) 등 대규모 한류 이벤트와 국가 주요 행사를 통해 '브랜드K'에 한류 이미지를 입혀 브랜드 영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주목 받는 'K방역' 이미지를 활용해 '브랜드K'에 바이

오·의료 분야 제품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유관기관과 연계해 제품의 고급화를 촉진한다.

또, '브랜드K'의 홍보와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와 기업이 참여하는 민간 합동협의체도 운영한다. 협의체는 제품과 브랜드의 전반적인 품질관리와 지적권 관련 분쟁 등 사후관리를 책임진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민간 흡수평가와 수출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유망기업을 공개 모집해 다음 달 중 2기 '브랜드K' 제품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브랜드K에 대한 기업들의 호응도 높은 모습이다.

중기부가 앞서 마케팅사업 참여 중소기업 789곳으로부터 온라인 설문 답변을 받는 결과 88.9%가 취약한 브랜드로 인해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은 경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응답기업의 92%가 브랜드K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승호 기자 bada@